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농가부채에 따른 재산권 강제집행 중지와 연체이자율 인하 요청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3월 5일 최근 농가부채로 인하여 부채농가에 대해 경매 등 재산권 강제집행이 행해짐에 따라 경매 및 압류등의 재산권 강제집행 중단과 14~18%에 이르는 고율의 연체금리를 원금리에 3%만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

최근 새 정부는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농정공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는 경영개선 자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농가부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산권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각 정당대표의원에게 요구했다.

#### “농협의 재산권 강제집행 중지와 연체금리 인하 요청”에 대한 농협중앙회 답변

##### ■ 농가부채에 대한 재산권 강제 집행 중지에 대하여

☞ 재산권 강제집행 중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강제집행을 유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보하도록 회원농협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부당한 재산권 강제 집행이 접수되는 경우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

##### ■ 연체금리에 대하여

☞ 2002년 2월만 현재 농협 상호금융 연체대출금 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15.3%~17.7%, 평균 17.2%로 일반 은행권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내 대출금리가 다소 높기 때문이다. 이에 상호금융 연체대출 금리를 다음과 같이 인하 할 것을 회원조합에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회원조합 권고 사항>

##### ■ 조합원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운용한도 조정

☞ 조합원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30일 이하 6% 이내, 90일 이하 7% 이내, 91일 이상은 9% 이내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 ■ 조합원 30일 이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인하

☞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특히 조합원의 30일 이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가능하면 3% 이내로 인하하여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2003년 1월 8일 원철희 의원을 대표로 2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현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4년 거치 5년으로 기간을 각각 2년씩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의 표는 한농연의 재산권 강제집행 중지와 연체이율 인하 요청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답변 내용이다.

## 김영진 농림부 장관 한농연 방문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한농연중앙연합회를 방문하고 한농연 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정의 중앙회장을 비롯한 한농연 임원들은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 확보, 협동조합의 강력한 개혁 등 농정개혁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것' 과 '농촌, 농업, 농민들을 위해 전국을 발로 뛰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장관이 돼 줄 것' 을 김영진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농정개혁 과제를 수행하는데는 농민단체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신뢰농정, 참여농정, 현장농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대내외적으로는 DDA농업협상과 한·칠레FTA 등 통상협상에서 국내 농업, 농촌,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개혁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 "농협의 자율적인 개혁을 존중하지만 이번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 내용은 너무 미약하다"면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심도 깊은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씻고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농림부 관료부터 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자금 인하 등 대통령 농정공약은 반드시 지키고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농가부채해결 등 근본적인 농촌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연합회 소식

### 제주 농업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문시병)은 지난 3월 24일 제주도의회에서 한농연제주도연합회를 비롯한 전

농제주도연맹, 한여농제주도연합회, 전여농제주도연합회 등 도내 11개 단체와 함께 '제주 농업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속되었던 감귤가격 폭락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한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제 단체들과 공감하면서 결성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월 20일 '감귤가격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제주농민대회'를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회 등이 공동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집회를 공동 개최했던 단체들을 주축으로 상설적인 연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5개 단체가 연대기구 결성을 3월 7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의하게 되었다.

이후 대표자회의와 집행책임자회의 등을 통해 문시병(한농연 제주도연합회) 회장과 안동우(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을 상임대표로, 고철희(한농연 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처음 5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외연을 확대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96년 6,079억원의 감귤조수입이 2002년에는 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과 '제주도 호당 평균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 1,047만원이 많은 3,084만원으로 전국 1위'라며 제주농민들의 피폐한 환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감귤문제만 아니라 중국산 마늘 수입증가와 맥주보리 문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DDA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는 '감귤, 포도를 비롯한 과수산업의 붕괴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를 밟는다면 '대규모 농민대회를 통해 저지할 것'과 'DDA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농민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강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시·군 순회 간담회

한농연경북도연합회(회장 박노옥)는 지난 3월 10일 영주시연합회와 봉화군연합회를 시작으로 시·군 연합회 순회 현장간담회를 실시한다. 경북도연합회는 이번 순회 간담회를 통해 회원과 대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연합회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순회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영주시·봉화군연합회의 간담회를 봉화군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상주시와 문경시연합회를 각 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경북도연합회는 도내 23개 시·군연합회에 모두 현지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한농연에 대해 - 회원정예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이 없는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인에 대한 2차 3차 후속지원 등 특화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인이 해외연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회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단위 회관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홈페이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생활정보 부분까지 링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농권운동에 중점을 두었어야 한다. 쌀의 전면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농업경영인대회에 있어 참가회비를 받지 않았으면 하며, 간소하고 검소하게 치뤘으면 한다. 또한,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했으면 한다.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 - 농·축협 이·감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협이 신·경분리 될 경우 금고를 회원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농협 대의원으로 읍면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통부문 개혁에 대해 강한 건의가 필요하다.

기타 - 품목분과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농촌·농민비하 TV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학생 농활은 득실을 따져서 시행하기 바란다. 농어촌자녀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경우 특혜가 있었으면 한다.

## 전북도연합회, 협동조합 이·감사 및 대의원 교육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임선택)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2일간 “2003년도 협동조합 이·감사 및 대의원 교육”을 전주유스호스텔에서 실시했다. 이번 협동조합교육은 2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180여명이 참가해 어느 때보다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연내용은 “회원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실천과제와 한농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탁명구 한농연 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이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우리나라 쌀 산업과 전북농업의 과제”에 대해 고영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새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대해 장중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의 사례발표, “비료·농약·농자재의 효과적인 구입요령”은 박일성 한농연전북도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협동조합과 노조의 올바른 관계정립”에 대해 김기태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 등 모두 7개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회원들은 다양한 강의내용과 강사진으로 여는 협동조합 교육보다 얻은게 많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강사로 나섰던 장중익 소장도 다른 지역의 교육보다 많은 준비를 했고 참가자도 많아 열의도 높았다고 평가했다.



## 그 밖의 농업계 소식

### 농단협 신입회장 선출 불발!

### 한농연, 전농 등 주요 농민단체『전국농민연대(준)』결성!!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출에 들어갔으나 단체간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24일 농협중앙회에서 다시 회의를 갖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이 날도 회장 선출방안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농단협 회장선출에 있어 한농연을 비롯한 전농, 농업기술자협회, 가톨릭농민회, 한여농, 전여농 등 6개 단체는 농민단체의 단결의 중요성과 기존 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이 농단협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대를 통한 회장선출을 주장했다.

반면, 양돈협회 등은 추대가 어려울 경우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농단협의 운영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러한, 농단협의 불협화음 속에서,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상층단체 중심의 농민운동과 강력한 실천력 부재, 농민단체 간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 등 여러 한계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한여농, 전농, 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농업기술자협회 등 6개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한계를 지양하고 실천 중심의 새로운 농민연대 단체라는 문제의식으로, 3월 24일, 기존의 농민단체협의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송남수(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전국농민연대(준)을 결성하였다.

전국농민연대 결성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 6개 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3월 24일 농단협 회장선출을 위한 회의에서 추대에 의한 회장선출과 투표를 통한 회장선출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농협중앙회 기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농민연대준비위원회 결성을 선포하였다.

전국농민연대(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00만 농민 대중이 조직되고 강력한 실천의 힘으로 오늘의 농업위기를 극복' 할 것임을 다짐하며, '연대단체의 통일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WTO협상 대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쌀 수입개방 반대투쟁, 협동조합개혁을 중심으로 오직 농업발전과 농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실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전국농민연대(준)은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송남수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등 6개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뜻을 같이

하는 농민단체 들과 함께 정식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 이경해 전회장 WTO본부서 농업협상 반대 단식농성

전북도의회 의원과 한농연중앙연합회 2대 회장을 역임했던 이경해 전회장(56)이 지난 2월 25일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앞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 거부와 한국의 개도국 지위 보장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경해 전회장은 이날 WTO 본부 정문옆 인도에 텐트를 설치한 뒤 우리는 하빈슨(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 초안을 거부한다',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보장하라' 는 내용의 영문 벽보를 내붙이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경해 회장은 또한 "타결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세부원칙 합의시한으로 정해진 3월말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하겠다"며 굳은 결의를 밝혔다.

이러한, 이경해 전회장의 농성에 대해 WTO 농업위원회 하빈슨 의장의 관심 표명과 현지 언론보도, 스위스농민연맹 등의 농민단체와 유럽 농민들의 동참 등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해 전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WTO 농업위원회에서의 세부원칙 마련이 실패함에 따라 4월 2일 귀국했다.

이경해 전회장은 39일간의 기나긴 농성과 단식으로 악화된 건강으로 귀국 후 바로 한농연중앙연합회 인근의 경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경해 전회장은 1990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 농업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할복을 시도한 바 있으며, 지난 2000년 11월에는 서울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하는 농민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 WTO농업위 개막, 한농연 제네바로 4명 파견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최종안 마련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비공식회의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이번 WTO 농업위 회의에는 농단협 차원에서 각 단체의 대표자를 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한농연은 중앙연합회 김홍기 수석부회장과 신명운 사업부회장을 비롯해 현지에서 농성중인 이경해 전 중앙회장을 격려하기 위해 전북도연합회 박영태 수석부회장, 장충열 장수군연합회장 등 4명을 참가단으로 파견했다. 이번 농단협 차원의 농민단체 참가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들 농민단체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정부측 관계자로부터 수시로 협상동향을 보고 받으면서 이번 협상에서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제네바 주제 대사와

의 면담과 스위스 농민단체와 연대방안을 모색해보며, 촉박한 일정이지만, 유럽의 농업실태도 조사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특별회의에는 장원석 WTO국민연대 공동대표(단국대 교수)가 국내 농업계를 대표해 정부 협상대표단과 함께 협상에 참여했다.

---

## 우리쌀지키기여성연대, 여성국회의원 한·칠레 FTA 비준거부 동참 촉구

한여농을 비롯한 전여농, 여성단체연합, 여성단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쌀지키기여성연대는 지난 3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정치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서명운동에 대한 동참을 촉구하였다. 특히, 여성국회의원 중에서 현재 단 1명만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여성계의 강한 불만을 표했다.

여성국회의원은 김정숙, 손희정, 이연숙, 임진출, 전재희(이상 한나라당 5명), 김경천, 김방림,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최영희, 추미애, 허운나(민주당 8명), 강숙자(무소속 1명)의원 등 총 14명이며, 이 중 3월 26일 현재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만이 국회비준거부에 서명한 상태다. 서명을 한 전체 국회의원은 10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우리쌀지키기여성연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거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각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

## 경실련, 김대중 정부 공약이행평가 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 11일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17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 58명에게 의뢰해서 이행단계별로 평가하였다. 이중 농업분야 평가 전문가로 김완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교수와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교수가 담당하였다.

농업분야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를 보면, 전체 17개 분야 중 공약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적극추진 했다고 평가(A)되어 이행률이 높게 평가된 분야는 통일, 여성, 국방, 외교 분야 다음으로 농업분야가 높게 평가 받았다. 전체 농업(해양수산 포함)부문에서 진행중인 공약이 61.8%, 완료된 공약 25%, 미착수된 공약은 13.2%로 나타났다.

또한, 경실련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공약으로 직접지불제와 농어가의 부채원금 상환유예, 이자경감책 등을 꼽았으며, 농어업재해보상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제 도입을 통한 재해피해 보상제도 도입이 미착수된 공약으로 평가하였다. 민농연